

# 大學教育改革的 得과 失

— 西獨의 경우를 中心으로 —

吳 漢 鎭

(韓國外國語大 教授)

## I.

1964년 2월 게오르그 피히트(Georg Picht) 교수가 「기독교와 세계」(Christ und Welt)라는 잡지에서 「독일의 교육참사」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다음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에 의해 개혁의 문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전자는 위의 논문에서 向後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同一학년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12% 이상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산업사회의 확장에 대처하기 위한 고등교육 인구를 배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교육의 기근은 마치 1945년도 직후의 경제적 기근과 같아 가능한 한 급속도로 대학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의 예언은 적중하여 고등교육 인구는 15년에 3~4배로 상승했다.

후자 다렌도르프는 그와 배를 같이하여 1965년에 「교육은 시민권」이라고 주장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모든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의 산업사회는 최소한 단기 고등교육기관 이상을 마친 중산층에 의해 「기술문화관료체제」가 형성될 것이란 이념적 선언을 했다. 이러한 선언은 실제적 사회발전과 맞아 떨어져 대학은 확장되었으며 대중교육을 위한 대학의 구조나 성격, 학문과 교육의 방향은 변질되었다.

이에 1968년 4월 10일 「독일 문교장관협의회」가 그간 각 주정부 주도하에 독자적 고등교육법

을 갖고 있던 것에 「연방고등교육법」이란 준칙을 통합작성 준비하였고 대중교육이란 목표와 「대학의 민주화」란 이념적 지표하에 각종대학의 개편작업을 위한 적절한 준법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미학문제는 대학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총장 협의회」(Rektorenkonferenz)가 발족되었으며 개혁사업과 계획은 「학술위」(Wissenschaftsrat)와 「교육학술 연방성」(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과의 공동작업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은 각종 대학의 「差等대신에 平等化」(Egalisierung statt Differenzierung)를 위해 단기 고등교육기관과 대학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합대학」의 모델이 지역적으로 시도되었는가 하면, 일반대학내에서는 대학운영이 「총장단 제도」 대신에 「의장단 제도」(Präsidential-statt Rektoratsverfassung)로 운영될 수 있게 운영체제의 변화가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총장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이제는 학생, 조교, 교수 또는 직원이 참여하는 「三者合意制」에 따른 대학의회와 각종 위원회에 의해 대학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학생선발도 자연적으로 시설을 요하는 분야는 정원제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졸업성적과 적성과 목적성 및 지역성을 고려하여 추첨, 배정했다. 수업년한도 과거에는 7~8년 이상을 요하던 것을 규제하여 가능한 한 연한을 압축시키고 있으며 부족한 교수층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70년도 초에 학위소지자가 교수자격 논문을 쓸 때까지 연구비를 지급하여 아카데미의 中産層을 확대

해 나갔다. 그리하여 「연방조교협의회」(Bundes assistenzkonferenz)는 자신들의 위치를 조교수 그룹으로 격상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교수자격 논문에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6년내에 교수로 임명이 되지 못하면 항상 강사로 머물러야 되므로 이러한 중견학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아카데미 지도직위제를 두었는가 하면 기타 시험 지도 및 학업지도위원으로 강단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교육제도 개편은 오늘 날에 와서 많은 득과 失을 가져왔다.

## II.

가장 큰 得은 첫째로 대학의 민주화로 인해 대학자체가 「민주학습의 場」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학의회에서 선출된 총장이나 각 영역별 학부장이 직접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學内外의 정보를 대학행정에 풍부히 할 수 있으며 낙후된 학문영역을 위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기할 수 있었고, 상이한 학문영역 간의 학문적 원리를 적절히 조절하여 영역 간의 협동학문연구 및 교수를 성취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대학이 대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대학에 자발적인 주도권을 요구하게 되었고, 각대학은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불러일으켜 대학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이 발생했으며, 학생들이 취업시장에 보다 가능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조직이 실제 사회에 맞는 교과내용으로 개선되었다.

세째는 급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장으로 독일의 시설은 완전히 근대화되었으며 풍부한 인적자원과 연구시설로 인해 각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정상급의 학문수준을 회복했다.

네째는 대학이 대중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 명실공히 적업교육을 위한 「공개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으며, 신설된 대학들은 대학을 가져보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이나 정신생활에 있어 「총매체」가 되었다. 비록 학생수가 半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1990년대

에 대학의 시설이 유향될 염려가 있겠으나 대학은 공개대학으로서 계속교육이나 접속교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보완될 것이다.

다섯째는 학업의 연한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심취도가 보다 강화되었다.

여섯째로 상이한 종류의 교육과정을 (교육대학 및 정규대학 등) 「총합대학」이란 새로운 한 지붕 밑으로 수용함으로써 (신설대학 경우) 각종 대학들이 가질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에는 적합한 교육모델로 형성되었다.

특히 「총합대학」에 설치된 교원교육 과정에서 초등교사 양성이 더이상 「교육적이거나 교육방법론」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진공」을 선택하여 수업하게 되었고, 중등교원 양성은 오히려 「교육 및 방법론」적 교육내용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퇴색하고 일반대학에 예속되는 (intergrieren) 보완체제로 전환되었다.

일곱째로 전문대학(Fachhochschule)들은 본래의 취지대로 실용적인 실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본래의 특성을 간직할 수 있었으며 대학개혁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경향이었으므로,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문대학을 찾는 경향이 종전보다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의 학생 질도 좋아졌고 일반대학으로의 적재현상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 III.

그러나 15년간의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잃은 것도 또한 많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엘리트대학에서 대중대학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학의 질적 손실을 가져왔다. 연간 6~18% 이상의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자연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접촉은 적어져 원활한 학술지도가 부족했다.

또한 학생의 미량 배출로 인해 자연히 취업기

회는 적어 고용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가져 왔다.

둘째로는 새로운 모델로 신설된 캠퍼스대학들이 도시민과는 유리된 곳에서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시대학생보다 시민생활과의 접촉이 부족하며 도시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전인교육을 위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과 연관된 학업 효율면에 있어서 손실이 컸다.

세째로는 대학의 양적 팽창에 의해 교수의 업무량이 많아졌으며, 각종위원회 참여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으므로 교수의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배움의 자유가 과다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실용적 학문욕구가 강하게 되어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었다. 이에 대학은 창조적 활동을 위한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대학의 이성을 고수하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네째로 신설된 「종합대학」내에 설치된 단기교육기관은 교육 목표상 필요한 실용적 학문의 성격을 잃어가고 장기 교육과정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띠고 있어 본래의 「종합대학」 취지가 이론과 실제에 위배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1965년 이후 몇년내로 아동출산율이 50%가 감소되어 1985년도 이후로는 고등교육인구가 적어지리라는 예측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과잉투자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연간 8,00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배출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취업경쟁이 심화되어 고급인력의 실업율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학과제는 대학의 기능을 교수와 연구기능 이외에도 계속교육이나 재교육, 집속교육 및 성인교육의 가능성을 찾아서 「대학의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 IV.

이상 언급한바와 같이 1965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던 개혁사업에서는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다. 그러나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했다 해서 대학이 학생들이 유망하는 온상지가 된 것은 아니다. 비록 학생의 질이 다소 저하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학의 팽창과 더불어 무수한 학술

적 번영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든 학문분야에 균형되게 영양을 공급했으며 양적 팽창에 질의 통제를 가하려 노력했다. 특히 학생수가 감소되리라는 1990년대를 향해서 현재까지 대학에 투입된 시설확장을 조절하고 유휴시설을 사회교육이나 기타교육에 환원시키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문제로서 제기 되었을뿐 심각성은 없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과잉투자가 사회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의 대학개혁이 사회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제 대학은 「공개대학」의 공교육기관으로서 새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기능적 확대」를 갖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편제나 학문조직의 편제 및 기구를 재정비하고 시설을 합리화함으로써 교육의 「내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교수들의 임무가 과다해지고 학문연구가 지극히 실용적인 면으로 치우친 바 있으며 대학의 학문자유가 위축된 바 있으나 교수들의 노력에(교수들의 학문수호연맹 결성) 의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이성」은 적절히 수호되었다. 특히 대학의 민주화운동으로 학문영역간의 협동과 균형적 발전을 가져왔고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에 따른 「대학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대학의 질 유지」가 어느정도 가능했다.

그밖에 학생들의 교육비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신설대학이 새로운 모델로 등장함으로써 옛날의 도시대학이나 새로운 대학들은 교육의 효과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효과적 집중현상」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육개혁은 많은 문제도 가져왔지만 사회 및 학문발전을 위해선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으며 사회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고 있다. 결국 학문연구와 교육이 사회-국가 발전을 위한 「유연한 체계」로 개편된 것만은 사실이며 이에 학문의 자유와 진리창조를 위한 전통적 체제도 고수되고 있음이 독일 대학개혁에 있어 특기할 점이다. \*